

입법정책정보

-제27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 · 개정	1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1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 · 개정	5
1.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5
2.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8
3.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13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 조례	1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7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5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6

I 상위법령 제 · 개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19.]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제정]

□ 제정 · 개정 이유

-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 또는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를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 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및 제25조).

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31조).

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등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2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23호, 2025. 1. 31.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82호, 2025. 3. 18. 일부개정]
<신 설>	<p>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 상담 · 검사 · 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 · 치료 ·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3. 05.] [부산광역시조례 제7544호, 2025. 03. 05., 제정]

□ 제정이유

고독사 등 고립된 1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의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역량 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및 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및 기관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 등과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군·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7544호, 202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3. 12.] [인천광역시조례 제7468호, 2025. 03. 12., 제정]

□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 하고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 및 지원, 사회주택위원회 및 종합지원 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2.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3.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추가 부지 확보 방안
4.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양성교육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
 - 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
 - 나. 사회주택의 건축·재건축·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8조(사회주택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0조(공동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 간 업무·비용·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
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2. 공급대상 택지 현황 등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4.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5.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사회경제적 약자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7468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25. 03. 12.] [경기도조례 제8360호, 2025. 03. 12., 제정]

□ 제정이유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나.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회안전약자

2.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남·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시행 2025. 03.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31호, 2025. 03. 19., 제정]

□ 제정이유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434 /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 의뢰안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97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제2절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각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3조의5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등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의6에서는 공사등 임직원의 징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의7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등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장제4절(감독)의 제7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등의 설립·운영 등 공사등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등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등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나,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63조의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등의 임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해임 요구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원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 비위행위에는 질의요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등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인사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기 전에 공사등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각주: 행정안전부장관이 2023. 12. 12. 개정하여 같은 날 통보한 것을 말함)에서는 공사등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확인 조사와 인사 발령, 개인정보 보안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각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는 대체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재기제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나 관련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공사등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1조 및 제76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공사등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45, 법제처 2023. 8. 4. 의견제시 23-0288 참조),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은 제3장제2절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장제5절(지도·감독 등)의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 중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장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15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해임 요구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임원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 비위행위에는 질의요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걱정 여부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인사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각주: 법제처 2022. 1. 19. 회신 21-0615 해석례 참조)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각주: 행정안전부장관이 2023. 12. 12. 개정하여 같은 날 통보한 것을 말함)9)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는 대체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적으로 제기제한 것으로 보임.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확인 조사, 인사 발령, 개인정보 보안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나 관련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97,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218 참조),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절 지도·감독 등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公款,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 ②·③ (생략)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5-0059 / 요청기관: 충청북도]

☐ 의뢰안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97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 보면,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의3),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성립·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제18조제3항),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1항),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제26

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및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2024 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각주: 해당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법제처 2022. 1. 19. 회신 21-0615 해석례 참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매입·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제3조제2항),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218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러시아, 인터넷 광고세 도입

□ 주요내용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사이트 및 플랫폼 등 ‘광고 배포자’와 광고 업체를 뜻하는 ‘광고 시스템업체’,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여 소득을 얻는 그 밖의 중개업체가 포함되며 TV, 라디오 방송사 및 정보 통신사가 소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주와 광고 중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에서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배포하는 광고 중개업체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광고세 세율은 업체의 분기별 광고 수익의 3%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 세수를 러시아 IT기업과 국내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광고세 납부 및 미납 세금 추징에 관한 업무는 러시아 정보통신대중매체감독청인 ‘로스콤나조르’가 담당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온라인 광고세 도입으로 향후 광고 게재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여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 간의 직접 거래가 증가하고 결국 업체 간 거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 러시아 온라인매체 Sostav.ru 기사(2025.03.27.)
- 러시아 일간지 Vedomosti 기사(2024.12.26.)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요내용

미국 에너지부(DOE)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과학기술·연구 협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에 제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이 장기화 될 경우, 협력 위축과 국가 신뢰도 저하, 나아가 한미 간 신뢰 약화 및 동맹 간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의와 함께, 보안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국회도 관련 의견 청취와 함께 한미 과학기술 협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한미 간 과학기술·연구 협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의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교체가 맞물려 양국 간 소통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우려는 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민감국가 목록을 개관하고, 지정사유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한 뒤, 주요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민감국가 목록 개관 및 관련 쟁점

(1) 민감국가 목록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y List)은 외국인의 방문 및 배치에 대한 美 에너지부 내부의 심사 및 승인 절차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으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이유로 포함된다. 美 연방법전 제50편 제2652조는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에 대한 신원조회(background review)를 사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연구소(national security laboratory) 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들은 연구소 방문 최소 45일 전에 신원조회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한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민감국가를 방문·접촉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2) 지정 사유

美 에너지부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2025년 3월 14일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 Sensitive Country List)’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민감 정보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에너지부 실험실에만 국한되는 조치이므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美 에너지부가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일 뿐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사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 한국 내 일각의 자체 핵무장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사(社, WEC) 간 원전 기술 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일부 미국 전문가는 민감국가 지정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전격 이루어진 것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비록 정확한 지정 사유를 밝힌 자료는 없으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을 검토해보면 그 지정 배경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단편적으로 공개된 과거 美 에너지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2017년 동안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총 25개국이다. 이 목록에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을 비롯해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적대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 등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국가들로 핵 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무기·핵 관련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보안 측면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록에는 미국의 우방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실상 동맹관계에 있는 대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3) 해제 가능성

우리 정부는 4월 15일 발효 전에 목록 해제를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美 에너지부 장관의 회담에서한미 양측은 美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정부는 해제 가능성이나 지정 해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은 공식적으로 대외 비공개로 작성·관리되고 있어 목록의 구성과 등재 및 해제 기준·절차나 갱신 시기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대상국과의 사전

협이나 통지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목록 해제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효일 이전에 가능할지 또는 발효 이후라도 미 에너지부의 절차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할지, 아니면 갱신주기에 맞춰 해제될지 등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은 1981년 미국의 민감국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목록에 포함되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 한국 측의 해제요청이 수용되면서, 1994년 7월에 해제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약 14년간 민감국가로 지정되어 있었고, 해제요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실제 해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는 민감국가 목록에서 해제되는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과 외교적 협상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주요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

(1) 연구개발 분야

민감국가 지정이 원자력 분야 등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현재로서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 방문 전 사전 승인 강화 등 일부 절차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명시적 제한 외에도, 국가 신뢰도 저하나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제협력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에 국제공동연구에서 타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안조치 규정을 추가하고, 국제협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 분야

美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단기적으로는 아래 이유로 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2025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은 막바지 단계로,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다. 당초 체코 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던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5년 1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해소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으로 원래 목표했던 3월 계약이 4월 또는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과 체코 간 원전 계약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35~2036년 사이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중 680MW를 SMR 상용화 실증 1기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산업체가 공동으로 혁신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민간에서도 SMR을 활용한 발전·열생산 등의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하여 SK·GS·두산 등 다수 국내 사업개발·제작·EPC¹¹⁾ 기업들은 미국 Nuscale 사(社), TerraPower 사(社), X-Energy 사(社) 등 미국의 민간 SMR 설계 기업과 역량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양자 회의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을 통한 다자협력을 통해 SMR 안전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전선 등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민감국가 지정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인공지능(AI) 분야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AI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에너지부 내 AI 연구 비중도 크지 않아 한미 간 AI 연구개발 협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정 기간 동안 美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자 방문,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에 있어 내부 심사가 강화되고, 다른 미국 연구기관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AI 연구 및 사업화 성과의 핵심 요소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는 미국상무부 관할로 상무부는 지난 2025년 1월 13일에 발표한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개정안에서 한국을 18개 핵심 동맹국·파트너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GPU 확보가 가능하다.

AI는 원자력처럼 기술 경쟁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AI 발 민감국가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I 연구개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공공·민간·대학의 AI 연구개발 안전성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 연구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AI 연구개발 협력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AI 연구개발 협력 성과를 제고하여 민감국가 지정으로 발생한 부정적 국가 이미지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

(4) 외교안보 분야

민감국가 지정 효력은 美 에너지부 및 그 산하기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외교 안보 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독자 생산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농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번 지정으로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지정 사유 해소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지정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간 신뢰 문제로 비화되어 동맹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감국가 지정이 곧바로 동맹관계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가며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데다, 美 에너지부 내 일부 관련 부서만 공유한 비공개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美 에너지부의 업무 영역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

향후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 해외 부처에 대해 국내 여러 부처가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 총괄 부처와 실무 부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외교부 총괄 하에,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상시적인 동향 파악과 소통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의회 외교를 통한 협력 지원 등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